

< 별첨 >

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,
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-

2023. 1. 30.



금융위원회

순 서

I . 2022년 정책 추진성과 및 평가	1
II .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2
III . 핵심 추진과제	4
[붙임] 주요 정책과제 추진일정	16

I. 2022년 정책 추진성과 및 평가

①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

- 국내외 통화긴축 전환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, '50조원+α 유동성 공급*' 등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로 안정 회복 중

* (채권시장안정펀드) 20조원, (회사채·CP매입 프로그램) 16조원, (증권사 유동성 지원) 3조원, (주금공·HUG의 PF사업자 보증) 10조원 등

- 기재부·금융위·한은·금감원 등 관계부처·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단기자금시장·회사채 시장에서 불안심리 완화

* 회사채금리(AA-,3y,%) : ('22.10말) 5.61 (11말) 5.48 (12말) 5.23 ('23.1.25.) 4.40
CP(A1, 3M) 금리(%) : ('22.10말) 4.63 (11말) 5.53 (12말) 5.21 ('23.1.25.) 4.68

② 고금리·고부채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

- 취약계층을 위한 '125조원+α 민생안정대책*' 시행 및 중소기업·소상공인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 연장

* ① 자영업자·소상공인에 대한대출, 低利 정책자금, 채무조정(새출발기금) 지원(80조원), ② 안심전환대출 지원(25+20조원), ③ 서민금융상품 공급(10조원)

- 급증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취약계층이 정상적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

③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규제혁신 및 제도정비 추진

- 빅블러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구성('22.7.)하여 오프라인 위주의 낡은 규제 정비*

* ① 온라인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, ② 대한대출 인프라 구축, ③ 신탁업 제도 개선(업무위탁 확대 등), ④ 중소기업 회계부담 완화, ⑤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지원 등

- 자본시장 제도 전반에 걸친 투자자 신뢰제고 방안 마련

* ① 공매도 개선(7.28.), ② 물적분할시 주주가치 제고(9.5.), ③ 내부자거래 사전공시(9.8.), ④ 상장폐지 제도개선(9.30.), ⑤ IPO 건전성 제고(12.16.), ⑥ 의무공개매수 도입(12.21.)

II. 2023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

1 정책 추진 여건

① 경제·금융시장내 불안요인 다수 존재

- 부동산 가격 하락, 한계기업 부실, 금융회사 건전성 저하 등 금융 리스크 산재
- 주요국 금리인상 지속, 실물경제 위축 등 상황악화시 국내 금융 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

② 경기둔화, 고금리 등 실물·민생경제에 많은 어려움 존재

-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, 소상공인·중소기업의 활력제고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긴요
- 서민금융 위축과 이자부담 증가로 금융애로가 커지고, 주거관련 금융부담도 크게 증가
- 민생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,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불법사금융과 금융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우려

③ 디지털화 등 여건변화에 맞는 금융의 성장잠재력 확충 긴요

-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, 빅테크 등의 금융분야 진출 확대 등 디지털 금융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
-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금융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산업 규율체계 마련 필요

2 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

- ◆ (1)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
 - (2) 실물·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
 - (3)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
- ➔ 12대 핵심 정책과제를 마련하고,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습니다.

정책 비전

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

금융시장 안정

- 01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
- 02 특히,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
- 03 기업 부실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 부실전이를 차단하겠습니다

실물·민생경제 지원

- 04 新성장 4.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겠습니다
- 05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·중소기업에게도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
- 06 금리인상,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·금융애로를 완화하겠습니다
- 07 고금리 시대,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
- 08 금융범죄·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

금융산업 육성

- 09 세계로 뻗어나가는 혁신하는 금융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
- 10 핀테크 등 금융분야 新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
- 11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
- 12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을 금융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

12대 정책 과제

III. 핵심 추진과제

금융시장 안정

1.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.

- **시장안정조치** 확대, 관계기관간 **긴밀한 정책 공조**

□ 기업 자금조달과 자금순환 원활화를 위한 시장안정 노력 강화

- ① 현재 활용가능한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*으로 적극 대응, 필요시 규모·대상 확대

* (채안펀드) 6.1조원(+9조원 캐피탈콜 가능), (회사채·CP매입프로그램) 7.6조원 등

- ② 특히, P-CBO('23~'24년중 5조원) 지원대상과 한도*를 확대하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

* 지원대상(여전사: A- → BBB-) 및 한도(대기업 계열한도: 4천억원 → 5천억원) 확대

- ③ 필요시 금융관련규제(예: 유동성규제 유연화조치*)도 탄력적으로 조정

* 은행권 LCR 규제비율 상향 유예(92.5%, '23.6.), 예대율규제 완화(은행 100→105%, '23.4.) 등

- ④ 금융권의 자체적 시장안정 노력*도 지속 유도

* 5대 금융지주회사 시장안정자금 지원, 증권사 PF-ABCP 매입 프로그램 운영 등

□ 금융시장 내 급격한 자금이동·쏠림에 의한 불안요인에도 면밀히 대응

- 은행채·공사채 등 우량물 발행시기 분산, 퇴직연금의 급격한 자금 이동 방지 등을 적극 시행

□ 기재부·한은·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시장안정을 위한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과거와 다른 양상의 위기요인에 대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대응

2. 특히,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.

- **부실우려PF** 사업정상화 지원, **건설사 유동성지원** 확대, **부동산 대출규제** 정상화

□ 정상 PF에는 원활한 자금지원, 부실우려 PF는 사업정상화 지원

①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사업장에 대하여,

- 「브릿지론 → 본PF」 전환시 사업자보증 지원(15조원)
- PF-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시 보증 지원(3조원, 주금공·HUG)

② PF 부실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 정상화 및 부실정리 지원

-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대주단이 부실·부실우려 PF 사업장을 자율적으로 정리(정상화 포함)하도록 유도
- 부실·부실우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캠프를 중심으로 조성(최대 1조원 규모)하여 대주단 정리노력을 지원

□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

①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*하여, 건설사 보증 PF- ABCP 차환 및 회사채 매입 등 지원

* AA-(A1) 이상은 채안펀드, A(A2) 이하는 회사채·CP 매입 프로그램, 건설사 보증 PF-ABCP 프로그램, P-CBO 등을 통해 지원

② 필요시 중견·중소 건설사에 대해 보증·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 확대*

* 非주택분야 PF에 대한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방안 포함

□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

① 다주택자 및 임대·매매사업자*에 대한 주담대 허용(3월말 시행)

* LTV: (다주택자) 규제 0→30% / (임대·매매사업자) 규제 0→30%, 비규제 0→60%

②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대출규제 추가 완화* 검토

* (예) 1주택자 LTV 추가 확대, 등록임대사업자 LTV 우대 등

3. 기업 부실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 부실전이를 차단하겠습니다.

- **기촉법 기한연장 추진, 워크아웃 대상 확대, 금융안정계정 조기가동**

- **신속금융지원(Fast-Track) 대상을 소규모기업(신용공여 10억↓)까지 확대**
※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회사의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연장, 금리인하, 신규자금 지원 등을 시행토록 허용
- **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정상화를 지원하는 '기업구조혁신펀드'를 '23년 중 1조원 조성하고 운용주체 변경***(성장금융→캠코)
* 캠코 자체 기업지원 프로그램 (예: 회생기업 신규자금대출(DIP금융), 자산매입 후 재임대(Sale & Lease Back))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상화 지원 효과 제고
※ 회생절차 졸업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(최대 500억원) 등 캠코의 기업지원 기능도 강화
- **「기업구조조정촉진법」 등 상시 구조조정 체계의 전면 점검·보완**
 - ① **신속한 기업 채무조정을 위한 워크아웃 절차를 규정하는 「기업구조조정촉진법」 기한('23.10월 일몰) 연장 추진***
* (~'23.上) 관계기관 TF(금융위, 법원 등)를 중심으로 추가 제도개선 과제 발굴 병행
 - ② **신용위험평가 대상 확대**(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→ 10억원 이상으로서 희망기업*)를 통해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 허용
* 기촉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워크아웃 절차 이용이 가능
 - ③ **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위험평가 세분화, 高리스크업종에 대한 수시평가 실시 등을 통해 기업 부실가능성 조기감지**
- **기업 부실의 금융권 전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대응여력 확충**
 - ① **소금융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화하고, 점검 결과에 따라 자본확충, 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지도**
 - ② **은행권 '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' 신설, 여전업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적립강화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건전성 규제 개선**
 - ③ **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'금융안정계정'을 예보기금에 설치하고 조기가동 준비**

4. 新성장 4.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겠습니다.

■ 정책자금공급 205조원 → 신산업·수출지원, 벤처·혁신기업에 모험자본 공급 확대

□ 新성장 4.0, 수출 5대강국 도약 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강화

① 정책자금공급액을 205조원으로 큰 폭 확대(전년比 +11조원)하고, 新성장4.0 전략 등을 반영한 5대 중점전략 사업*에 81조원 집중공급

* ①글로벌초격차 산업 지원 ②미래유망산업 육성 ③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④유니콘 벤처·중소·중견기업 육성 ⑤3高 현상 등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

② 정책금융(기은)-무역협회 협업을 수출기업 低利대출상품* 출시 등 총 16조원의 수출금융 전용상품 공급

* (대상) 수출 중소기업(수출 1천만불 이하) / (지원조건) 대출금리 최대 △2.7%p 인하

③ 글로벌 공급망재편에 대응하여 '공급망 대응펀드*' 조성('23년중 1조원)

* (지원분야 예시) ①대기업-협력업체의 해외현지 동반진출 지원 ②소부장 경쟁력 강화

④ 혁신성장펀드 조성(5년간 15조원)을 통해 신산업·전략산업 육성

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한 연장 및 필요시 지원업종 확대 추진

⑥ 산은 부산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특화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

□ 벤처·혁신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(모험자본) 유인 제고

① 공모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일반투자자들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(BDC) 도입

② 투자자에게 유망 투자기회를, 혁신기업에게는 성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(現 규제 샌드박스) 제도화 추진

□ ESG·녹색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확충 및 인프라 구축

① '25년부터 시행될 상장기업 ESG 의무공시제도의 대상과 공시내용 구체화

② ESG·녹색금융 분야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확대*

* '22년도 공급실적 4.4조원 → '23년도 공급목표 5.8조원

③ 中企 ESG 컨설팅(기은·신보) 지원, ESG 지수개발(거래소) 등을 통해 ESG 기업의 역량 제고 및 투자활성화 촉진

5.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·中企에게도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.

-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 개선,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확대, 80조원 중소기업 지원

□ 자영업자·소상공인 3종 금융지원패키지(80조원)* 차질없이 추진

- * (1) 유동성·경쟁력 강화 자금지원(41.2조원), (2) 고금리대출의 저금리대환(8.5조원), (3)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(30조원)

□ 자영업자·소상공인 금융지원패키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

①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적용대상 확대* 및 이용편의 제고**

- * 코로나19피해→쏠자영업자,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 포함 ** 한도상향, 상환기간 확대 등

②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지원기간 연장(당초1년→2년) 및 대상 확대* 추진

- * (현행)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 →
(개선) '20년도 소상공인 1차 지원프로그램 이차보전 수급자도 포함

③ 새출발기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용대상 확대*

- * (예) 미소금융 연체자 등 포함 (미소금융재단을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으로 추가)

④ 신용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게도 정확한 신용평가를 통해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빅데이터·AI기반의 인프라 확충*

- * (1) 신용정보원 집중·활용 기업신용정보 확대·세분화, 데이터전문기관 확대 등
(2) 개인사업자 데이터 수집·관리를 통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(「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」)

□ 80조원 규모(중기부 30조원 포함)의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시행

① 3高현상(高금리·高물가·高환율)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한 자금애로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* 제공

- * 低利 고정금리 대출, 창업초기기업 금리감면 상품 공급, 원자재價 상승 피해·인건비 부담기업 등에 대한 유동성지원 확대, 수입신용장 만기연장승인 완화 등

② 혁신산업 육성 및 창업·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·투자자금 지원*

- * 혁신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, 창업·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자금공급, 담보가치·재무제표가 아닌 기술력·미래영업이익 등에 기반한 신규자금 공급

□ 은행권 자율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지원을 위해 이자부담 경감*, 대출회수 자제 및 신규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 방안 시행

- * (예) 저신용·성실상환 차주 금리인하(최대 △3%p), 低利 고정금리 특별대출 등

6. 금리인상,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·금융애로를 완화하겠습니다.

-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 확대, 보증금반환대출 제한폐지, 시중은행 주담대 대환대출 확대

□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고,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애로 완화

① 정책보증 지원을 통해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 확대

- 주금공 보증비율을 높이고(90%→100%), 보증료율을 인하(0.1%p↓) 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되도록 유도

②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 제공

- * 다만,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·투과지역 3억원초과 APT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

③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* 폐지

- * ①투기·투과지역내 15억원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(現2억원) 폐지→ LTV한도 적용, ②규제지역내 9억원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및 ③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

□ 주택 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부담 완화

① 주택가격(6→9억원이하)·대출한도(3.6→5억원)·소득요건(0.7억원→제한없음)을 한시(1년)적으로 완화한 특례보증자리론 공급(1.30일~, 39.6조원)

- 주금공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낮은 금리*로 지원

- * 만기별 기본금리 : 4.25~4.55%(일반형) or 4.15~4.45%(우대형) + 최대 90bp 금리우대

② 주담대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은행이 시행하는 대환대출(예: 만기연장)에 대해 한시적(1년)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허용(증액불허)

- ※ 금리상승, DSR 규제강화 등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 차주에 대해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

③ 상환애로를 겪는 주담대 차주에 대해서 원금상환 유예(최대 3년)를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*

- * (현행) 재무적 곤란사유 & 6억원미만 주택보유자 → (개선) DTI ≥ 70% & 9억원미만 주택보유자 추가

□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요건 확대(공시가 9→12억원, 「주택금융공사법」 개정안 국회 계류 중)

7. 고금리 시대,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.

- 긴급생계비 대출 도입, 한시적 취약차주 채무조정 확대,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정 추진

□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의 자금지원 강화

①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*를 10조원으로 확대

*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(조원): ('19) 8.0 ('20) 8.9 ('21) 8.7 ('22) 9.8(잠정) ('23) 10

② 저신용·저소득 취약차주*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'긴급생계비 대출' 도입·시행

*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신용 연체자, 무소득자 등까지 포함

③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 확대*

* '23년도 공급계획 : (당초 계획) 1,400억원 → (확대) 2,800억원

④ 서민금융 대출한도 증액조치 적용기한 연장*

* 근로자햇살론(1,500만원→2,000만원) 등 대출한도 증액조치를 '23년에도 연장

⑤ 성실상환 청년에게는 채무조정 중이라 하더라도 햇살론유스 지원 및 햇살론카드 보증한도 증액(최대한도 : 2백만원→3백만원)

□ 취약차주 재기지원을 위해 차주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공

①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,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*(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특례)을 쏠연령 취약차주**로 확대(1년간)

* 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~50% 감면

** (예) 신용평점 하위 20%, 실직·휴직, 장기입원치료, 재난 등 피해자

② 기초생활수급자·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,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* 확대(1년간)

* 개인워크아웃(연체90일 이후)에 준하는 이자·연체이자 전액 감면, 원금감면(최대 30%) 제공

③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,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정 추진

□ 청년도약계좌 출시(6월), 연계 금융지원 확충 등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

8. 금융범죄 · 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

- 조직적 보험사기 예방방안 마련, 전환사채 이용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

□ 불법·불건전 영업을 사전차단하고 사후 제재·처벌 강화

- ① 신·변종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, 가상자산거래소 사기이용계정 지급정지*, 통장협박**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

* 가상자산거래소 보이스피싱 피해자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구제절차 적용 등

**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정지

- ②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신속한 차단*으로 서민피해 예방

* 정부·검찰 등 외 인터넷진흥원·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도 전화번호 차단 요청 허용

- ③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(자본시장 거래제한,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)의 신속한 제도화 추진(「자본시장법」 개정 추진)

- ④ 강력보험범죄, 조직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「보험인수 가이드라인*」 마련, 보험사기 알선·권유 행위에 대한 사후제재 강화 추진

* 소득대비 과도한 보험가입시 재정심사 강화 등

- ⑤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*(무자본 M&A 등)에 대한 대응 강화

* 전환사채 발행·유통시 공시의무 강화 등 투자자 보호방안 강구

- ⑥ 불법 주식리딩방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정비*(「자본시장법」 개정)

* (1) SNS·채팅방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한 영업 금지

(2) 손실보전·이익보장 약속 금지, 광고규제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

□ 불법사금융 및 금융범죄에 대한 당국의 대응역량 강화

- ① 불법사금융 및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금융당국·수사기관간 공조강화*

* 불법사금융 척결 TF, 불법사금융 실무협의체 등을 통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및 수사·단속 적극 지원

- ②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및 금융위·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

- ③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기능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*, 금융회사-금융정보분석원간 정보교류 확대 등 추진

* (1)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를 준법감시인과 구분하여 별도 지정, 역할 강화

(2)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적절성이 중점 반영되도록 자금세탁방지 활동 평가기준 개선

9. 세계로 뻗어 나가는 혁신하는 금융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

- 빅테크·금융보안 규제 정비, 국내금융사의 해외진출 및 외국금융사의 국내진입 지원

□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 개편을 통해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과 금융·비금융 융복합 신상품 개발 지원

①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 허용 등 과감한 금융규제 완화 방안 마련

② 금융업 영위 빅테크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율체계* 마련

- * (1) 빅테크의 데이터·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
- (2) 빅테크 그룹 내 금융·비금융간 위험전이 발생 가능성 방지 방안
- (3) 빅테크-금융회사간 업무 위·수탁 및 제휴 관계에서의 리스크 관리

③ 금융보안규제의 국제 정합성 및 혁신 친화성 제고*

- * (1) 금융회사 등이 리스크 기반의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 개선
- (2) 금융보안 규제를 '목표·원칙 중심, 사후책임 중심'으로 전환
- (3) 금융보안 전문기관을 통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검증 및 컨설팅 기능 강화

□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강화

① 신흥국에 신용정보·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 수출을 활성화 하고, 인프라 수출에 연계한 금융회사의 동반 해외진출 유도

- ※ (사례) 금융결제원은 캄보디아 국가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('17.9.~'19)
→ 8개 시범실시 은행에 국내은행 3곳이 포함

② 해외진출 성공·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전략 고도화

③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에 맞는 탄력적 지원* 제공

- * 현지 시장정보 제공 → 진출전략 수립 → 해외투자자인력 및 협업기업 네트워킹 주선 등
- ※ (사례) 국내 핀테크사는 AI기반 뱅킹서비스를 통해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 해외 시장 진출 → 현지 제휴사 확대 및 전기바이크 대여·충전시설 등에 금융서비스 공급

□ 글로벌 금융회사·투자자금의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

① 글로벌 금융회사의 아시아 지역본부 국내 유치 노력 강화

- 글로벌 금융회사 국내 진입을 저해하는 금융규제·관행을 점진·보완하고,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비금융 지원방안*도 강구

- * (예) 세제혜택, 금융·노동·외환규제 완화,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방안 마련

② 해외 국부펀드 자금 유치를 위한 관계부처·정책금융기관 협력강화

10. 핀테크 등 금융분야 新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

-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활성화, 디지털자산 규율로 혁신환경 조성

□ 핀테크 기업에 대한 컨설팅, 정책자금지원, 데이터세트 종합지원

- ① 핀테크 기업에 법률·회계·기술 등 전문가의 종합컨설팅을 제공
- ②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확대(5천억원 → 1조원)하고,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정책자금 공급 추진

- ③ D-테스트베드* 참여기업이 전문 데이터분석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제공데이터 범위(비금융 포함)도 확대

* 핀테크 스타트업, 예비 창업자 등이 구체적인 사업 개시전 기술·아이디어의 사업성, 실현 가능성 등을 미리 검증·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및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

- ④ 전문·지원인력이 부족한 중소 핀테크 회사도 샌드박스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원단과 전담책임자 매칭 지원

□ 데모데이 등 핀테크 기업들의 투자설명 기회를 다각도로 제공하고,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

□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

-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단계적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

▶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우선 입법 → 국제기준 가시화 시 추가·보완

* (1단계) 고객자산보호, 불공정 거래 규율 등 이용자보호 규제 도입 →
(2단계) 국제기준 가시화시 가상자산 발행·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 보완

- ② 조각투자·증권형 디지털자산(“토큰증권”) 발행·유통 규율체계* 정비

* (1) 증권 발행시 제도권 내에서 분산원장 기술이 활용되도록 하여 투자자 재산권 보호
(2) 혁신 수요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권리의 발행과 소규모 장외거래 지원

11.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.

- **외국인ID제도 폐지,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, 개인 공모펀드·채권 투자 확대 지원**

□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으로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 제고

① 외국인 ID제도 폐지 및 통합계좌 활성화 등 외국인 투자편의 증진*

*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및 투자내역 보고의무 폐지, 장외거래 사후보고 범위 확대 등

② 상장사에 대한 영문공시제도 단계적 의무화*

* 대상기업 : ('24년) 자산 10조원 이상 → ('26년)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
공시내용 :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

③ MSCI, 해외투자자 대상 설명회·IR 개최 등 글로벌 소통노력 강화

□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를 통한 상장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

① 주주친화적인 배당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당제도 개선*

* (제도) 배당액 결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「상법」 유권해석(법무부), 「자본시장법」 개정 (관행) 개선방안을 상장협 등 표준정관에 반영, 개선여부를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

② 자사주 취득·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 강화, 과징금 상향 등 대량 보유보고의무(5%룰)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여 일반주주 권익 제고

③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활성화*를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

* (예) 스튜어드십 코드에 ESG 요소 반영, 주주활동 공시 강화 등

□ 자본시장 투자기반 확충 통한 자금조달 환경 개선

① 공모펀드 수수료·보수체계 합리화, 수익률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 마련

② 개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*

* (1) ISA비과세 혜택대상 상품에 회사채 및 K-OTC 시장내 비상장주식 등 포함
(2) 고위험·고수익 채권(BBB+이하) 등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제공 등

12.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을 금융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

- 금융회사의 **경영투명성 제고**, **연금저축에 대한 별도 예금자보호한도 적용**

□ 금융회사 책임경영 강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

- ① 임원책임 명확화를 통해 금융권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고, 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*

* (‘20.6월 既제출한 지배구조법 정부안)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,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,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등

- ②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금융회사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·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구성·운영방식 등을 개편

- ① (금융분쟁조정위원회) 회의별 참석위원 주첨제, 신속상정제도(Fast-Track) 도입
- ② (제재심의위원회) 변호사 중심 → 금융전문인력, 법학교수, 경제·경영 학계전문가 등

- ③ 「금융소비자법」상 소비자보호규제를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 적용*하고, 고령층·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피해 예방노력을 강화**

* (현행) 신탁 → (개선) 상호금융업권(농·수·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

** 고위험상품 가입 및 현금서비스 이용시 지정인 통보서비스 적용대상 확대(고령층→장애인),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업무처리 및 금융착취 예방 지침 마련 등

□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 구축

- ①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여타 예금과 별도로 추가 예금보호한도* 적용 추진

* (예) 기존 예금보호한도(5천만원) +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별도 예금보호한도(5천만원)

- ②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펫보험 활성화* 방안 마련

* 반려동물 등록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정비 펫보험 전문보험사 허용 및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확대 등

- ③ ‘온라인·원스톱 대환대출’ 인프라,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추진

- ④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 확대(최대 1천만원 → 5천만원)

- ⑤ 계약자에 손해가 되는 보험 불완전판매 방지방안* 마련

* 기존계약 해지 후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 승환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 추진

- ⑥ 코로나로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(09:30~15:30 → 09:00~16:00)

주요 정책 과제	조치사항	시행시기
1.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.		
▶ 채안펀드 규모 확대	시행	필요시
▶ 회사채·CP 매입프로그램	자금공급 집행	1월~
▶ P-CBO 프로그램 확대 개편	P-CBO 발행	1분기
▶ 유동성 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·확대	금융위 의결 등	필요시
2. 특히,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.		
▶ 브릿지론 → 본PF 전환시 사업자보증 지원	기시행	연중
▶ PF-ABCP 대출 전환 보증	관련 상품 출시	1분기
▶ 「PF 대주단 협약」 개정을 통한 자율정리 지원	「PF 대주단 협약」 개정	연중
▶ 부실·부실우려 PF 사업장 캠프 매입·정리	관계기관 협의	연중
▶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	—	연중
▶ 다주택자 및 임대·매매사업자 주담대 허용	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	3월말
▶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대출규제 추가 완화	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	필요시
3. 기업 부실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 부실전이를 차단하겠습니다.		
▶ 신속금융지원 제도 절차단축 및 지원내용 확대	방안 발표	1월
▶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	관계기관 협의	상반기
▶ 캠프 기업지원 기능 강화	지원 프로그램 시행	3월
▶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	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	—
▶ 부실징후기업 선정을 위한 신용위험평가 방식 고도화	관계기관 협의	상반기
▶ 손실흡수능력 테스트 정례화	손실흡수능력 점검	연중
▶ 은행권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신설	은행업 감독규정 개정	상반기
▶ 금융안정계정 예보기금에 설치	예금자보호법 개정	—
4. 신산업 4.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겠습니다.		
▶ 신산업 4.0 정책자금공급액 확대	자금공급 집행	1월~
▶ 5대 중점전략 사업 자금공급	자금공급 집행	1월~
▶ 수출기업 저리대출상품 출시(기은-무역협회)	자금공급 집행	2월~
▶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	펀드 조성 계획안 마련	연중
▶ 혁신성장펀드 조성	모펀드운용사 선정	1분기
▶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기한 연장	산은법 개정	—
▶ 산은 부산이전	지방이전 계획안 승인	'23.12월
▶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(BDC) 도입	법 개정 추진	—

주요 정책 과제	조치사항	시행시기
▶ 상장기업 ESG의무공시제도 구체화	방안 발표	연중
▶ ESG·녹색금융 분야기업 정책자금 지원확대	자금공급 집행	연중
▶ 중소기업 ESG 컨설팅 및 ESG 지수개발	컨설팅, 지수개발 계속	연중
5.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·중소에게도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.		
▶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선	방안 발표	3월~
▶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시행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	방안 발표	1월
▶ 새출발자금 채무조정대상 확대	미소금융 등 포함 협의	상반기
▶ 80조원 규모의 종합 금융지원 방안	방안 발표	1월~
6. 금리인상,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·금융애로를 완화하겠습니다.		
▶ 저금리 고정 전세자금대출 확대	관련 상품 출시	1분기
▶ 전세대출보증 제한 폐지	주금공 내규 개정 등	1분기
▶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등 완화	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	1분기
▶ 특례보증자리론 공급	관련 상품 출시	1월~
▶ 주담대 채무조정제도 확대	프리워크아웃 모범기준 개정	1분기
▶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 요건 확대	주택금융공사법 개정	-
7. 고금리 시대, 취약계층 자금난과 상환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.		
▶ 긴급생계비 대출 출시	재원마련, 상품출시	3월
▶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공급 확대	예산 출연, 상품 지속운영	1월
▶ 서민금융 대출한도 증액조치 연장	대출한도증액 유지	1월
▶ 성실상환자 연계·추가지원 강화	전산개발 등	2분기
▶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특례 확대	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	1분기
▶ 기초수급자·고령자 등 채무조정 지원 확대	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	1분기
▶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추진	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	-
▶ 청년도약계좌 출시	관련 상품 출시	6월
8. 금융범죄·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.		
▶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제재 강화	자본시장법 개정	-
▶ 강력보험범죄, 조직적 보험사기 대응체계 마련	보험사기특별법 개정	-
▶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	방안 검토·발표	연중
▶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정비	자본시장법 개정	-
▶ 불법사금융 예방 및 이용자 보호 강화	대부업법 시행령 개정	연중
▶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성능 개선	FIU업무규정 개정	2분기
9. 세계로 뻗어 나가는 혁신하는 금융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		
▶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 허용 등 과감한 금융규제 완화 방안 마련	개선방안 마련	상반기

주요 정책 과제	조치사항	시행시기
▶ 금융업 영위 빅테크 규제체계 마련	규율방안 마련	3분기
▶ 금융보안규제 개편	「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TF」를 구성, 구체적 시행방향 검토	1분기
10. 핀테크 등 금융분야 新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.		
▶ D-테스트베드 기능 강화	관계기관 협의	연중
▶ 샌드박스제도의 내실있는 운영	운영방안 추진	2분기
▶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	관련 법 제정 추진	-
▶ 조각투자·증권형 디지털자산 발행·유통 규율체계 정비	정비방안 마련	2월(잠정)
11.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.		
▶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	자본법 시행령 개정	3분기
▶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	자본시장법 개정	-
▶ 자사주 취득·처분 공시 강화 등 제도 개선	방안 발표	4분기
▶ 대량보유보고의무(5%룰) 위반시 과징금 강화	자본시장법 개정	-
▶ 기관투자자 책임투자 활성화	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	연중
▶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 방안 마련	방안 발표	연중
▶ 개인 채권투자 활성화	조특법 개정	-
12.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을 금융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.		
▶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	지배구조법 개정	-
▶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제재심의위원회 개편	금소법시행령·세칙 개정	3분기
▶ 소비자보호규제 적용업권 확대 등	금소법 개정	-
▶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별도 예금보호한도 적용	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	연중
▶ 온라인·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	시스템 운영 지원 등	5월
▶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	보험업법 개정	-
▶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 확대	예금보험공사 내규 개정	1월
▶ 보험 불완전판매 및 조기해지 방지 방안	보험업법 개정	-